늘어나는 '쓸쓸한 죽음'…채권추심서·독촉장만 덩그러니

특수청소업체를 통해 본 광주·전남 고독사 실태

지난해 무연고 사망 121건 전년보다 92%나 급증 중년 고독사·청년 자살 심각

집안에는 쌀 한 톨 안보이고 채무판결서·연체내역서 널려 "고인의 고민 느껴져 안타까워"

#. 폭설이 쏟아지던 지난달 초, 특수청소업체를 운영 중인 박봉철씨는 늦은 시간 목포의 한 다세대 주택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30대 세입자가 극단적인 선택했으니 집 청소를 부탁한다는 전화였다. 연락을 받고 이튿날 청소를 의뢰받은 집으로 향했다.

집 주인은 숨진 지 1주일 정도 지난 것 같다고 전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바닥에 넓게 흩어져 있는 채무이행판결서, 각종 독촉장, 카드연체 대금 내역 등이 눈에 들어왔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고인이 겪었을 고민이 느껴졌다.

주방 냉장고에는 먹을 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쌀 한 톨 보이지 않았다. 고인이 먹은 것으로 보이는 라면봉지 몇개와 담배꽁초만 가득했다.

박씨는 "집 안에 널브러진 각종 문서들을 보니 고인이 심적으로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인의 경우 30대 젊은 나이지만 유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라고 말했다.

쓸쓸히 홀로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신의 죽음을 애도해줄 친인척이나 친구하나 없이 쓸쓸히 세상에서 잊혀지는가 하면, 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않다. 특히 최근에는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수청소업체를 5년째 운영 중인 박씨는 코로나와 경기 침체, 1인 가구 증가 속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붕괴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중년층의 고독사와 청년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청소부는 변사사건, 고독사, 자살로 죽은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정리한다.

박씨는 "고독사, 자살 현장 등 자살예방센터와 유족들을 통해 한달에 30건 정도를 의뢰받아 처리하고 있다"며 "고독사, 자살 현장 등은 고인이 숨진 뒤 적게는 1주일 많게는 6개월이 지나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약품과 장비를 통해 청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30대 남성의 집 안에 채권추심서와 카드연체대금내역서 등 각종 문서들이 널브러져 있다. 〈박봉철씨 제공〉

예년만 해도 고독사가 일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지난해부터 자살 현장 청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었다는 게 박씨의 설명이다.

현재 정부가 집계하는 공식적인 '고독사'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고독사'는 1인 가구가 가족·이웃과 교류 없이 홀로 숨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무연고 사망과 비슷하지만 범위는 더 넓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파악한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 2018년 63건에서 지난해 121건으로 92%나 늘었다. 무연고 사망이 사망 후 시신을 인수해 갈 유가족이나 지인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 고독사의 일부에 불과한 무연고 사망만 보더라도 위기상황을 엿볼 수 있다.

제대로 된 실태 파악과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사는 독거노인과 1인 가구를 집중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청년층 자살도 심각하다.

박씨 업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부터 자살 현장 정리건이 전체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40세 미만의 젊은이들의 자살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박씨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청년층의 자살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자살자는 2016년 339명→2017년 329명→2018년 373명→2019년 346명 등 최근 4년 간 13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살자 숫자의 증가세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20세부터 40세 미만까지의 자살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9세 자살자는 2017년 93명에서 2018년에는 100명대를 넘어서며 103명을 기록, 지난 2019년에는 10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광산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여성의 집을 정리한 적이 있다. 집안도 유복하고 생활 환경이 나쁘지 않았는데,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된 건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20~40대의 자살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을 갖지 못해 1인 가구들은 결국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자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며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평소 자살에 대한 고민과 고통을 나눌 사람이 없다 보니 자살로 이어지게될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례 웹서비스 불만

노동계 "지역별 유사 사례 검색 불가능"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산업재해 사건 판례를 조회할 수 있는 '산재 판례 정보 웹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지역별 검색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산업 재해와 관련, 자신이 위치한 지역 산업 현장의 유사 사례를 찾아보길 원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공단측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산업재해 사건 판례를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산재 판례 정보 웹 서비스'를 시작했다.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판결문의 경우 공개되지 않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와 달리, 웹 서비스 홈페이지(https://sanjaecase.kcomwel.or.kr)에 접속하면 공단이 보유 중인 산재 사건 판결문 2만9000여건을 무료로 살펴볼 수 있다.

하급심 판결문의 경우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공단측은 이같은 점을 들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판결문 공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노동계에서는 그러나 요양·휴업·장해·유족 등 조건별로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반면, 지역 산업현장의 유사 사례를 검색하는 게 불가능해 미흡하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지역 내 몰려있는 업종에 대한 산업 재해 현황을 살펴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보니 노동자들이 속한 지역 내 동일·유사 업종의 판례를 찾아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권오산 광주·전남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공단의 산재 판례 정보 웹서비스는 공단과 현장 노동자들 간 인식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사례"라며 "산재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비슷한 지역 산업 현장 사례라는 점에서 검색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역별 산업재해 현황은 법원별 판례를 일일이 찾는 수밖에 없지만 유형별로 접근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단에 퍼지는 봄 2일 오전 광주시 서구 공공근로자들이 서구청사 입구 화단에 봄꽃을 심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5급 공무원 이상 횡령 배임·저명 인사 성범죄 사건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검·경 수사권 논란 재점화 우려

5급 공무원 이상의 3000만원 이상 횡령 배임 사건과 국회의원,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저명 인사의 성범죄 사건을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 범위와 일부 겹치면서 교통 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3일 전국의 시·도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수사 주체에 따른 구체적인 수사 기준과 범위를 담은 공문을 내려 보냈다.

공문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해야 하는 사건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일선 경찰서에서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시도경찰청에 이관해야 하는 중요 사건 기준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경찰은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해야 하는 사건은 ▲금액 상관없이 고위공직자의 뇌물 수수 사건 ▲5급 공무원 이상의 3000만원 이상 횡령·배임 사건 ▲2억원 이상의 보험사기 등 사건이다. 경찰은 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망자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한 화재사건도 수사하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한정한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의 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은 ▲뇌물범죄 3000만원 이상 사건 ▲사기·횡령·배임 범죄로 5억원 이상 사건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5000만원 이상 사건 등으로 경찰의 수사 범위가 겹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또 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대형참사범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권 다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자칫 사건 이첩 등의 과정에서 수사권 다툼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경찰은 이외 ▲13세 미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수사와 ▲장·차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저명 인사 관련 성범죄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등 여성청소년 관련 사건 ▲사망 피해자 발생한 의료사고 ▲대규모 압수수색이 필요한 마약사건 등 형사사건도 시·도 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음주운전 빗나간 애정과 우정

남친 대신 운전했다 거짓 진술하고 동료 음주운전 방조…벌금형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남자친구 대신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을 하는가 하면,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도 운전하는 것을 묵인한 동승자들이 벌금을 물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여·2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시 서구 광산구 장신로에서 서부교육지원청 앞 사거리까지 약 7㎞를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남자친구 B(24)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B씨 부탁을 받고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뒤 'B씨는 뒷자석에 누워있었고 내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수사를 방해해 죄질이 나쁘지만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응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동료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2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8월, 운전면허가 없는 동료 D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자신의 승용차 키를 건네주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D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상태에서 1.4㎞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5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0타경 72967	1	광산구 소촌로100, 104동 8층 801호 [소촌동,소촌동모아엘가아파트] 59.8957㎡[임대차보증금금145,000,000원,전입일자2017.7.27,확정일자2017.7.28]배당에서보증금이전액변제되지않으면잔액을매수인이인수함]	아파트	223,000,000 223,000,000	매수인에게대항할수있는을구순위2번임차권등기[2020.12.24등기]있음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20타경 12491	1	나주시 남평읍 남평2로32-26, 에이동 3층 302호 [벧엘연립주택] 58.46㎡	연립주택	40,000,000 40,000,000	
[대지/임야/전답]					
2020타경 8195	1	영광군 묘량면 덕흥리 486-1 2917㎡	답	96,261,000 96,261,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10969	1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453-5 194㎡[매각제외컨테이너1동및비닐하우스소재]	전	35,890,000 35,890,000	
2020타경 12057	1	화순군 동면 마산리 334 1957㎡[연고미상분묘6기소재]	전	31,312,000 31,31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72066	1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산129-4 893㎡[공유자박유순의지분9/77전부,공유자김태중,김한중,김현중,김현주의각지분6/77전부]	임야	13,454,130 13,454,13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분묘소재.목록1현황자연림,전및묘지로이용,목록2,3.5자연림및묘지로이용
		동소 산129-7 480㎡[목록1과지분동일]	임야		
		동소 산129-11 192㎡[목록1과지분동일]	임야		
		담양군 봉산면 연동리 산2-13 486㎡[물건번호1:지적도상맹지]	임야		
	2	동소 산2-3 397㎡[공유자박유순의지분9/77전부,공유자김태중,김한중,김현중,김현주의각지분6/77전부.현황자연림및묘지로이용지적도상맹지]	임야	3,232,660 3,232,66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분묘소재
2020타경 72066	3	담양군 봉산면 유산리 산51-4 11321㎡[공유자박유순의지분9/77전부,공유자김태중,김한중,김현중,김현주의각지분6/77전부.현황자연림,전및묘지로이용]	임야	87,333,480 87,333,48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분묘소재
2020타경 73311	1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1247-11 1691㎡[공유자위서현지분1/5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26,717,800 26,717,8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자동차,중기]					
2020타경 10518	1	사용본거지: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1로[송죽리,141] 등록번호:182소5150 차명:K7 연식:2020	자동차	33,000,000 33,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동곡로430[월전동]평동주차장
	2	사용본거지: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1로[송죽리,141] 등록번호:94거0355 차명:봉고Ⅲ 1.2톤 연식:2019	자동차	18,000,000 18,000,000	보관장소:광주북구우치로337-6글로벌주차장
2020타경 12002	1	사용본거지:전남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538 [교원리] 등록번호:82버0220 차명:대우25톤카고트럭 연식:2009[차량유리창깨져있고,앞뒤번호판이분실상태]	자동차	12,000,000 12,000,000	보관장소:광주남구송암로124-3송원주차장
2020타경 73571	1	사용본거지:광주 북구 용봉동 효산로12번길 25, 1동 504호[광주아파트] 등록번호:38노5236 차명:K5 연식:2015	자동차	11,500,000 11,500,000	보관장소:광주남구송암로124-3송암주차장
[기타]					
2020타경 10969	2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387-1 703㎡	목장용지	170,934,000	일괄매각
		동소 387 1135㎡[매각제외비닐하우스소재]	목장용지	170,934,000	
2020타경 71940	1	나주시 송월동 916-3 2609㎡	과수원	918,055,000	일괄매각.맹지
		동소 880-2 1429㎡	과수원	918,055,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1. 3. 17.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1. 3. 24.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말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3.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길호